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군수산업정책과 그 성격

박사 전 경 송

1. 서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기 위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는 한편 우리 인민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증보판 제4권 299페이지)

식민지통치시기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대륙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군수산업을 세우고 우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였다.

조선강점 첫 시기 토지약탈과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실시 등 농촌수탈이 위주로 되었던 일제의 경제약탈정책은 1920년대 중엽부터 전력, 화학, 금속 등 일련의 식민지산업을 세우는데로 지향되였다. 1931년 9.18사변이후 일제는 농공병진의 기만적인 간판밑에 조선에서 본격적인 식민지산업정책을 실시하는데로 나아갔다.

일제의 식민지산업정책은 1937년 중일전쟁도발이후 로골적인 군사적성격을 띠고 실시되었으며 1941년 태평양전쟁도발이후부터는 절정에 달하였다.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의 실시로 하여 조선의 귀중한 자원은 깡그리 약탈당하였으며 온 나라는 황폐화되고 전대미문의 기아와 빈궁이 지배하는 암흑천지, 인간생지옥으로 변하였다.

이 글에서는 1931년 9.18사변이후 일제가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그 단계별 주요내용을 《군수회사법》을 비롯한 주요법령자료들의 분석을 통하여 그 침략적, 약탈적성격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2. 본론

2. 1. 군수산업정책실시의 배경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의 실시는 일정한 사회력사적, 경제적배경을 가지고있다.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의 실시는 무엇보다도 1920년대부터 추구하여온 《다나까상주서》와 같은 대륙침략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일제는 오래전부터 대륙침략정책을 추구하여왔다.

《명치유신》이후부터 《정한론》이나 《대동합방론》과 같은 조선과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론을 내놓고 그 실현을 추진시켜온 일제는 1920년대말부터 대륙침략전쟁계획을 로골적으로 드러내었다.

1927년 6월 다나까내각은 도표에서 《동방회의》를 소집하고 《대중정책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대중정책강령》에 기초하여 다나카는 《천황》에게 《상주서》를 바치었다.

다나카는 《상주서》에서 《만일 야마도민족이 아시아대륙에 출동하기를 원한다면 만주

와 몽골에 대한 지배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는것은 그의 첫걸음으로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은 《그의 후방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떠벌이었다.((원동에서의 국제관계》중권 218페이지)

이처럼 이 시기 조선을 먹고 그를 발판으로 만주와 몽골을 장악하며 나아가서 중국을 침략하고 동아의 맹주가 되어 아시아를 제패하려는것은 일본의 기본국책으로 되었다.

일제는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기본국책에 따라 1931년 9.18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강점하였으며 1937년 7월 중일전쟁에 이어 1938년 7월에는 하싼호사건을, 1939년 5월에는 할힌골사건을 도발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 대륙침략전쟁을 도발하고 확대하면서 조선에 더욱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것은 조선총독 미나미가 《제국의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 조선이 지닌 사명》(《태평양전쟁사》1 아오끼서점 1972년 232페이지)이니 《반도는 대륙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제국의 유일한 발판》(《일본파시즘과 동아시아》아까시서점 1977년 75페이지)이라고 로골적으로 췌친것과 관동군사령관 혼조가 한 기밀문건에서 《태평양의 제해권을 잃는다는 가장 불리한 경우를 예상하면 제국의 활로는 조선반도》(《태평양전쟁사》1 아오끼서점 1972년 196페이지)라고 한데서 명백히 나타났다.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의 실시는 다음으로 일본의 대륙침략전쟁수행에서 조선이 차지하고있는 경제적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산물이다.

전쟁은 방대한 군수품을 소모하는 과정이므로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의 도발과 확대는 필연적으로 군수품생산을 위한 더 많은 물적자원의 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시기 전선의 확대로 인한 군수품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비하여 공업생산능력은 제한되어있었고 자원도 심히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충분히 보장할수 없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군수품생산을 위한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일정하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침략전쟁의 확대를 계기로 늘어난 군수품에 대한 수요를 장기적으로 충족시키는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중국 대북제국대학 교수 고토 기요시는 《일본의 발전정도로서는 도저히 지나(중국)사변의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충분히, 장기적으로 계속 보급하는것이 곤란하였다.》고 하였다.((인적자원론》하쓰젠사 1941년 204페이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조선은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보장하는데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었다.

조선은 우선 1930년대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의 기본전선이였던 중국과 룡지로 잇닿아있으므로 군수물자보급통로로서 유리한 지리적위치에 있었다.

1930년대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일본본토로부터 중국전선으로의 군수물자보급통로는 크게 3개가 있었다. 첫번째 통로는 일본으로부터 조선해협을 건너 경부, 경의선철도를 거쳐 중국의 봉천(심양)에 이르는것이고 두번째 통로는 조선동해를 건너 우리 나라 북부의 라진, 청진, 웅기, 성진 등 주요항구들을 거쳐 중국 동북지방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조선서해를 지나 대련, 천진, 청도 등 북중국의 여러 항구에 이르는것이 세번째 통로였다. 이러한 통로들가운데서 제일 안전한것은 조선반도를 육로로 거치는 두개였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제는 보급통로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에서 필요한 군수품을 직접 생산한다면 바다를 건너지 않고 생산지에서 침략전쟁터까지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

게 물자를 보급할수 있다고 타산하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에서 일제가 군수산업정책을 실시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조선은 또한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생산보장에 절실히 요구되는 지하자원을 풍부히 가지고있었다.

대표적으로 군수품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재생산의 기본원료인 철광석과 석탄, 마그네사이트, 흑연, 월프람 등 일본에는 없거나 매우 부족한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풍부하였다.((식민지시기 조선공업) 미래사 1991년 72페이지)

이처럼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수행에서 경제적중요성으로부터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길로 나아갔다.

2. 2.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실시의 주요단계와 내용

2. 2. 1.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실시의 주요단계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실시는 두 단계로 갈라볼수 있다.

그 첫 단계는 1931년 9.18사변이후부터 1937년 중일전쟁도발전까지이다.

첫 단계의 군수산업정책은 일제가 조선을 앞으로 저들의 대륙침략정책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침략적목적밑에 군수산업의 기초를 닦는데 집중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군수산업의 기초를 닦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농공병진이라는 기만적인 정책으로 가리워졌다.

일제가 들고나온 기만적인 농공병진정책은 1931년에 조선총독 우가끼에 의하여 작성된 《조선산업정책대강》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

일제는 9.18사변을 도발한 이후 침략전쟁수행과 관련하여 조선경제를 그에 복종시킬 목적으로 1931년 10월 《조선산업경제조사회》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조선산업경제조사회》는 《조선산업경제개발에 관한 일반방침》을 작성하여 그것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였다.

조선총독 우가끼는 그것을 《조선산업정책대강》으로 구체화하였다. 여기에서 우가끼는 조선의 산업을 《...광범한 생산부문의 전면적발전으로 전환하며 ...특히 요람시대에 있는 광업과 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조선의 지리적 및 자원적특질에 맞게 일본제국전반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히 기여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조선경제년보) 1939년 72페이지)

이것은 강점이래 조선에서 일제가 실시한 농업위주의 경제적락탈정책이 대륙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생산을 위한 산업도 동시에 밀고나가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일제는 농공병진정책을 구체화하여 조선에서 산업의 진짜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선은 전시경제하에 있어서, 아니 장기전을 예견하는 조건하에서의 대륙병참기지로써 각종 산업 특히 국방기초산업을 충실히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발전을 가할것이다.》라고 명백히 하였다.((조선경제의 새로운 구상) 동양경제신보사 1942년 26~27페이지)

여기서 대륙병참기지로써 조선의 국방기초산업이란 군수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전력, 금속, 화학 등의 산업이었다.

이로부터 1930년대 전반기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수산업의 기초를 닦는대로 집중되었다.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실시의 두번째 단계는 1937년 7월 중일전쟁도발후부터 태평양전쟁을 거쳐 1945년 8월 패망까지이다.

이 시기의 군수산업정책은 일제가 농공병진의 기만적간판을 집어던지고 그 군사적성격을 더욱 로골화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일제는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리하여 전선은 중국본토에로 확대되었고 군수품의 수요량도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이 로골적으로 실시되었다는것은 1938년 8월 총독부에서 소집한 제1차 산업부장회의에서 총독 미나미가 《첫째로, 조선이 제국(일본)의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 가지는 사명을 명확히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현 사변에서 조선은 대지(중국)작전에 필요한 식량과 잡화 등 상당한 량의 군수물자를 공출하여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직 미약하다. 앞으로 보다 큰 사태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설사 얼마동안 대륙작전군에 대하여 일본으로부터의 해상수송로가 차단되는 경우에도 조선의 능력만으로 이것을 보충할수 있는 정도까지 조선의 산업분야를 다각화하며 특히 군수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한데서 나타나고있다.(《조선경제년보》 1939년 3페이지)

이것은 일제가 중일전쟁도발후 그 이전과 달리 조선에서 군수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저들의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였다.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을 로골적으로 선포한 일제는 1938년 9월에 진행된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에서 《시국의 전진에 따라 조선이 제국의 대륙정책의 전진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데 비추어 조선에서 각종 산업을 더욱 진흥시키는것과 함께 특히 군수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긴절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군수산업부설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였다.(《조선사연구회론문집》 3 1967년 통계서사 147페이지)

이 조사회에서 작성된 《군수공업의 확충에 관한 건》에서 일제는 1941년까지 군수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철강재, 경금속(알루미늄, 마그네슘), 석유대용품, 화약 등 주요군수원료와 제품생산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식민지시기 조선공업》 미래사 1991년 29페이지)

이처럼 일제는 조선에 대륙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수산업을 세우기 위하여 1930년대 초에 기만적인 농공병진정책을 들고나왔다면 1937년 중일전쟁도발이후부터는 그의 군사적성격을 로골화하였다.

2. 2. 2. 군수산업정책실현을 위한 각종 법령의 조작

일제는 조선에서 대륙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수산업정책실현을 위한 각종 법령들을 조작하였다.

일제가 조작발표한 각종 법령들은 조선에서 군수산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것은 조선에서의 군수산업정책이 철저히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의 필연적산물이므로 국가적인 권력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였기때문이다.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실현을 위하여 조작된 일제의 각종 법령들은 193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태평양전쟁도발에 이르면서 전쟁형편이 악화될수록 그 건수가 많아지고 군사적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일제는 우선 《중요산업통제법》을 통하여 1930년대 전반기 조선에서 군수산업의 기

초를 닦으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1931년 12월 《중요산업통제법》에서 17개 산업부문을 중요산업으로 규정하고 그가운데서 금속, 화학 등 군수산업의 기초로 되는 분야에 진출하는 독점자본가들에게 여러가지 정치, 경제적특권을 부여하였다.

일제는 군수산업의 중요한 기초분야로 되는 식민지조선의 금속공업부문에서의 독점자본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철업장려법》, 《강재의 수출입관세개정》, 《제철보조법》 등을 조작하였다. 이것은 일본독점자본가들의 군수생산을 위한 금속공업분야에서의 진출을 직접 추동하는것으로 되었다.

일제는 중일전쟁도발을 앞둔 1936년부터 군수공업원료의 확보, 값죽은 노동력의 리용, 발전능력의 조성 등을 타산하여 《중요산업통제법》을 조선에 적용하였다.

일제는 또한 중일전쟁도발이후 군수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림시자금조정법》을 공포하고 군수산업확대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림시자금조정법》은 1937년 9월에 공포되었으며 조선에 적용된것은 그해 10월부터였다. 이 법은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의 견지로부터 자재 및 자금사용에서 낭비를 없애고 그것을 군수산업부문에로 집중시킬 목적으로 조작되었다.((조선사연구회론문집) 3 통계서사 1967년 153페이지)

일제는 《림시자금조정법》에 따라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수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집중하기 위하여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자금자치조정단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을 통하여 많은 자금을 군수산업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조석유제조업, 화약 등 군수생산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 조선에서 산업부문을 중요성에 따라 1, 2, 3부류로 나누고 설비와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1부류에는 금, 동, 철, 석탄, 인조석유 등의 군수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부문이 속하였으며 이것을 중요성에 따라 다시 최우수군수산업과 기타 군수산업으로 구분하였다. 2부류에는 인조섬유, 팔프제조업 등이, 3부류에는 직접적인 군수산업은 아니지만 경제전반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속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산업부문을 이와 같이 구분해놓고 군수산업부문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1938년의 산업부문별 자금투자정형을 보면 1부류에 69%(그중 최우수군수산업에 65%), 2부류에 23%, 3부류에 8%였다. ((조선경제년보》 1940년 137~139페이지)

1939년에도 산업부문별 자금투자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이 시기 조선에서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자금투자가 전체의 2/3이상에 달하였으며 군수산업의 기초를 닦는데 집중되었던 1930년대 전반기와 큰 차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림시자금조정법》은 전적으로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자금투자를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는 특히 태평양전쟁도발후 《기업허가령》과 《기업정비령》, 《군수회사법》 등의 법령들을 조작공포하고 조선에 적용함으로써 군수산업정책실행책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1941년 2월에 공포된 《기업허가령》은 그해 12월에 조선에 적용되었다.

《기업허가령》의 골자는 조선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것이였다.

일제는 1920년에 조선에서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의 설립은 등록제로 하도록 하

였다. 그러나 일제는 태평양전쟁도발이후 군수물자수요량이 더욱 늘어나는데 따라 군수물자생산에 모든것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에 《기업허가령》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회사설립에서 허가제가 다시 도입되었다.

일제는 《기업허가령》에 따라 조선에서 산업부문의 483개 업종을 지정하고 이 부문에서 기업의 설립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식민지조선의 개발과 민중》 아까시서점 2008년 188페이지)

《기업허가령》을 적용한 구체적내용을 보면 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에는 중요한 사업의 경우 조선총독의 허가를, 기타 사업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였다.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은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것을 말한다. 이미 설립된 기업인 경우 60일 이내에 일정한 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였다.

조선에서 《기업허가령》의 적용실태를 보면 이 법이 전적으로 군수산업을 더욱 강화하는데로 지향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조선에서 《기업허가령》이 적용되기 전인 1940년과 적용된 후인 1942년의 회사설립자료를 분석하여보면 잘 알수 있다.

1940년에 조선에서 새로 설립된 회사의 총수는 253개였는데 그중 조선인회사는 102개(40.3%), 일본인회사는 125개(49.4%)였다. 《기업허가령》이 적용된 이후인 1942년에 설립된 회사의 총수는 213개였는데 그중 조선인회사는 75개(35.2%), 일본인회사는 131개(61.5%)였다. 같은 기간에 새로 설립된 회사들의 자본금규모를 보면 1940년에 전체 량 3 699만 8 000원중 조선인회사의 자본금이 566만 1 000원(15.3%), 일본인회사의 자본금이 2 930만 6 000원(79.2%)였다. 그러나 1942년에 새로 설립된 회사들의 총자본금 8 181만 8 000원중 조선인회사의 자본금은 606만 7 000원(7.4%), 일본인회사의 자본금 7 209만원(88.1%)이었다.((《식민지조선의 개발과 민중》 아까시서점 2008년 189페이지)

이것은 이 시기 《기업허가령》이 조선민족자본의 발전을 억제하고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적용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군수회사의 절대다수가 일본인회사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기업허가령》은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실행책동을 강화하는데로 철저히 지향되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1942년 5월 12일 조선에서 군수산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정비령》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기업정비령》에서 기업을 정비하는 목적이 군수물자의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기업, 설비, 소유권 및 경영권을 수탈하여 군수산업에 넘기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뇌까렸다.

일제는 이 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의 기업들에 다 해당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탈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하였다. 일제는 적용대상에 대하여 《물자의 생산 및 가공, 수리, 판매, 수출입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을 하는자 또는 조선총독(군사상 필요한것은 룡해군대신)이 지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일제는 《기업정비령》에서 군수산업에 대하여서는 일반명령, 민수산업에 대해서는 개별명령을 적용한다고 구분한 다음 각각 구체적인 규정들을 설정하였다.

일반명령이란 군수산업을 보존확장하고 그 생산요소(자본, 설비, 원료자재, 노동력 등)의 류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영업권, 설비, 자본 등의 이동에 대한 제한, 금지 그리고 법인의 합병, 해산에 대한 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것이였다.

개별명령이란 민수산업을 군수산업을 보강하는데로 돌리거나 없애버리기 위한 명령이였다.

이것은 일제가 침략전쟁수행을 구실로 그리고 전시경제에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

다는 구실로 조선민족자본경영의 기업전체를 모조리 수탈할것을 예견한것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기업정비령》은 중소상공업 특히 조선민족자본을 전면적으로 수탈하여 군수산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패배에 직면한 저들의 처지에서 벗어나보려는 최후발악적인 수단이였다.

태평양전쟁에서 패배의 국면에 들어선 일제는 1943년 10월 《군수회사법》을 제정 공포하고 1944년 10월부터 조선에 적용하였다. 결과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은 최절정에 이르렀다.

《기업정비령》이 각종 기업을 정리하여 그 설비나 자금, 노동력을 보다 중요한 군수산업부문으로 돌리려는 목적을 추구한데 비하여 《군수회사법》은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직접 군수생산업체의 운영에 개입하여 그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1944년 12월에 1차로 55개 회사, 1945년 1월에는 2차로 44개 회사를 군수회사로 지정하였다.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군수산업에는 주요병기 및 그 부분품, 철강재와 경금속, 희유금속, 각종 연료, 중요화학제품 등의 생산부문이 속하였다.

《군수회사법》은 군수회사로 지정된 기업은 책임을 지고 부여된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생산책임제를 골자로 하였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군수회사에 대하여 기한과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군수물자의 생산이나 가공 혹은 수리명령을 내리면 해당 기업에서는 생산책임자와 생산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그 생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였다. 만일 생산책임자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종 처벌을 받게 되였다.

조선에서 1차, 2차에 걸쳐 군수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99개였다.

조선에서 군수회사로 지정된 회사들의 자산이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45년 8월현재 요업 63.8%, 제철 97%, 화학 91.2%, 기계기구 73.4%, 경금속 64.5%, 석탄, 광업 78.3%, 전력, 가스 84.6%, 석유, 고무 83.7%, 직물 40.9%였다. (《식민지조선의 개발과 민중》 아카시서점 2008년 203페이지)

조선에서 군수회사수는 99개로서 많지 않지만 군수회사들의 자산이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특히 제철, 화학, 전력, 석탄, 광업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실현을 위한 각종 법령들을 끊임없이 조작공포하였다.

2. 2. 3. 각종 군수원료, 제품생산의 확대와 략탈의 강화

일제는 우선 조선에서 대륙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생산을 위한 금속, 화학, 경금속 등의 원료가공, 반제품생산시설들을 세우고 그 생산물을 모두 략탈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함선과 탱크, 무기 등 각종 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채굴과 그 가공부문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철강재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1934년에 미쯔비시제강주식회사 겸이포제철소를 일본제철주식회사에 통합하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무산일대에 풍부히 매장되어있는 철광석을 원료로 일본제철주식회사 청진공장, 미쯔비시광업주식회사 청진공장을 세웠으며 일본고주파중공업주식회사 성진공장, 패망직전에 미쯔비시제강주식회사 평양공장 등 제철제강시설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철강재를 모두 일본으로 략탈하여 전쟁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생산에 리용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화약과 인조석유 등 군수품생산의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원료와 제품생산에도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일제는 지하자원과 전력원천이 풍부한 함경남북도지구에 노구찌재벌을 중심으로 하여 군수품생산을 위한 화학제품생산시설들을 차려놓았다.

일제는 1935년 4월 흥남지구에 조선질소화약주식회사를 세우고 총탄과 포탄생산의 필수적원료인 화약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생산량은 1941년에 이르러 일본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였다.((조선사연구회론문집》12 177페이지)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후 일제는 고펜포제철소 류안공장, 삼척석회질소공장, 진남포파린산석회공장 등도 모두 화약제조공장으로 개편하고 군수용화약생산을 대폭 늘이었다.((일제의 조선침략사》2 514~515페이지)

일제는 흥남과 함경북도 영안(오늘의 명간), 경흥지구에 갈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제품생산시설들을 세워놓고 각종 군수용연료와 합성고무, 베클라이트를 생산하여 침략전쟁에 충당하였다.

특히 일제는 흥남지구에 원자탄개발을 위한 비밀기지(NZ공장)를 설치하고 원자탄개발과 폭발시험까지 감행하였다.

일제는 경금속제품생산도 적극 장려하여 비행기제작에 필수적인 원료인 알루미늄과 마그네시움 등의 원료와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 나라로 빼앗아갔다.

태평양전쟁시기 비행기는 함선과 함께 일제의 무장장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였기때문에 그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과 마그네시움 등 경금속자원의 수요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일제는 미쓰비시경금속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 조선에 풍부한 보크사이트광석과 마그네사이트광석을 리용하여 1940년 한해에만도 1 155t의 알루미늄(1944년에는 1만 5 999t)과 259t의 마그네시움(1944년에는 1 627t)을 비행기제조용으로 략탈하여갔다.((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조사》조선편 5분책)

일제는 우리 나라에 각종 군수산업시설들을 설치하였을뿐아니라 침략전쟁이 확대되는데 맞게 그 군수원료, 제품생산량을 늘이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일제는 1938년에 《생산력확충4개년계획》을 작성하고 각종 군수원료와 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일제는 이 계획을 통하여 1938년부터 1941년까지의 4년사이에 중요물자 15종을 생산하는데 설비자재와 로력, 자금 등을 집중공급하고 그 생산량을 크게 늘임으로써 저들의 군수물자의 수요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였다.

생산력확충을 위한 중요물자 15종이란 철강재류, 석탄, 경금속(알루미늄, 마그네시움 기타), 비철금속(동, 연, 아연, 석 등), 금, 인조석유 등이었다.((대동아전쟁과 경제전설》62페이지)

이처럼 일제가 이 시기에 내건 중요물자생산의 확대품종이란 군수산업의 확대강화에 소요되는 원료, 연료이거나 군수용기자재들이었다.

일제는 전쟁형편이 더욱더 악화된 1943년에 들어서면서 5개의 초중점산업이라는것을 규정하고 그 생산에 자재, 자금, 노동력, 수송수단, 전력 등 모든것을 최대한으로 복종시키는데로 나아갔다. 5개의 초중점산업이란 철강, 석탄, 경금속, 선박, 항공기 등의 생산과 관련되는 부문이었다.

일제가 초중점산업까지 규정하고 군수생산을 확대하는데 미쳐날뛰게 된것은 1943년 이후 태평양전쟁의 정세가 저들에게 불리해지고있었으며 전쟁에서의 당면한 승패가 이 부문들의 군수생산형편에 크게 달려있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일제가 이 시기 얼마나 어려운 전쟁형편에 처하였는가는 다음의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일제는 1941~1945년 사이에 군수생산의 확대를 선박 1 421척(361만t)을 생산하여 전쟁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침몰된 선박은 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것만도 3 206척(881만t)으로서 대략 생산량의 2.5배에 달하였다. 또한 비행기도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입었을뿐아니라 서둘러 만들었기때문에 생산한것들가운데는 쓰지 못하는 오작품이 상당히 많았다.((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조사》제1책 79페이지)

일제는 이와 같이 전쟁형편이 저들에게 더욱 불리해지고 저들의 군수생산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철강재, 경금속, 석탄, 전력, 광물, 화학부문을 초중점대상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군수원료와 제품을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부문에 대한 전시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여기에 일본독점자본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적극 조장하는 최후발악적인 책동을 감행하였다.

2. 3. 군수산업정책의 침략적, 약탈적성격

식민지통치시기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군수산업정책은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에서 실시된 군수산업정책은 조선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저히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것이였으며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깡그리 약탈하고 우리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것을 전제로 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군수산업정책이 침략적이며 약탈적인것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철저히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복종되였기때문이다.

일제가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을 실시한것은 저들의 대륙침략정책에서 조선이 차지하고있는 군사전략적위치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동아의 맹주가 되어 아시아대륙을 제패하려는 기본국책에 따른것이였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확대할수록 참패의 구렁텅이에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고 여기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군수품의 많은 몫을 조선에서 생산보장하였다. 조선에서 생산된 철강재와 화약을 비롯한 군수원료들은 각종 무기와 총탄, 포탄, 함선과 비행기 등 일제의 전투기술기재를 만드는데 충당되였다. 일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무기로 아시아 각지에서 침략전쟁의 불길을 계속 확대하였고 이 과정에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고 재부를 파괴약탈하면서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던것이다.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군수산업정책이 침략적이며 약탈적인것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조선을 황폐화시켰기때문이다.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은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약탈을 전제로 하여 실시되였다.

그것은 일제가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을 실시한것자체가 대륙침략정책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지리적위치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나라에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는 각종 지하자원에 대한 약탈을 배경으로 하였기때문이다.

일제는 1935~1941년 간에만도 조선에서 철광석생산량의 40~50%와 선철, 강철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실어갔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조선안의 군수산업에 리용하였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있던 군수자원인 중석, 크롬강 등은 50%, 아연, 망간, 몰리브덴 등은 50~90%, 니켈, 안티몬, 수은, 운모, 석면 등은 100% 조선에서 약탈하여 수요를 충족

시켰다. 이것은 조선에서 감행한 일제의 지하자원략탈책동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의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전제로 하여 실시되었다.

일제는 조선에 설치한 군수산업시설들에 초보적인 노동보호조건도 갖추어놓지 않고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 10시간, 지어 14~16시간의 긴 노동시간과 가혹한 노동강도의 적용 등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 인민들은 중세기적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일본인의 절반도 안되는 기아임금을 받았다.

일제는 1939년말에 겸이포제철소에서 일본인노동자에게는 하루 2원 13전의 임금을 주었다면 조선인노동자에게는 65전을 지불하였다. 이것은 6명의 식구가 좁쌀죽을 먹으며 겨우 목숨을 유지할 정도의 것이었다. 게다가 전시군수생산의 증대와 민수생산의 감축으로 하여 물가가 계속 올라갔기때문에 이러한 기아임금은 우리 인민들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처럼 식민지통치시기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군수산업정책은 철저히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것이었다.

3. 결론

일제는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우리 나라의 수많은 물질적재부를 약탈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의 피땀을 짱그리 짜냈다. 결과 우리 나라는 전대미문의 기아와 빈궁이 지배하는 암흑지대, 인간생지옥으로 변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설움 많고 수난 많은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의 실시과정은 우리 나라 경제의 부문간 구조를 철강재를 비롯한 1차원료의 생산과 가공에 치우친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완제품생산공정은 설치하지 않은 것이 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군수품생산과 약탈과 관련하여 늘어난 금속, 화학공업은 해안지대와 북부조선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그로 하여 조선경제의 기형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전 조선에서 실시된 일제의 식민지군수산업정책에 대하여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공업화》니, 《개발》이니 하면서 식민지약탈죄행을 부정하고 미화분식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과거 조선침략죄행에 대하여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배상할 대신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에 더욱더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이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에 대하여 적개심을 높이고 있으며 일제가 지난날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반드시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실마리어 군수산업정책, 《다나까상주서》